

수신: 세계일보 환경부 송구로 기자님

fax 792-4848

<<월간 세계와 나>> 10월호 원고

음식찌꺼기는 자원이다

박영숙/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지구를 구하는 대변혁>>.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발간된지 6개월만에 20만부 이상이 팔린 책의 제목이다. 이책은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식량, 환경 그리고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라는 'EM 기술'에 대한 것이다. 이책의 저자는 일본 오키나와시의 류큐(琉球)대학의 농학부 교수로서 EM 기술보급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히가 데루오(比嘉照夫) 박사이다. 히가 박사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자연농업위원회 위원장, (재)자연농법국제연구개발센터의 이사직 등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45개국에서 EM 기술지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

EM기술이란 무엇인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구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EM이란 '유용 미생물군'의 영어인 'Effective Micro-Organisms'의 대문자를 딴 것이다. 이책의 설명에 의하면 자연계에는 소생형의 미생물과 붕괴형의 미생물이 있는데 EM은 소생형의 미생물의 집합체라고 한다. EM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 작물생산에 유효한 유산균, 효모균, 방선균, 광합성 세균 등 10속 80종 이상의 선별된 미생물군의 복합 배양된 액체를 지칭한다.

EM이 토양 속에서 증식하면 항산화 물질이 생기면서 흙 속의 공기나 물을 정화하여 식물을 싱싱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생형 미생물의 분비물에는 아미노산이나 유기산, 다당류, 비타민 등의 동식물에게 영양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EM을 농업에 활용하는 경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고 한다.

EM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EM은 당초 농업용의 토지개량제로서 개발된 것인데 그 응용의 가능성은 농업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적인 과제로 등장한 공해와 환경문제 해결에도 확대되고 있다. EM을 농업에 적용시킨 경우 농산물의 수확량과 품질의 향상은 물론 병충해도 막을 수 있어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축산의 악취완화, 수질정화, 유기폐기물의 퇴비화, 오염지대 정화 그리고 공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항산화제로서 응용되고 있다. EM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화학물질, 방사선 물질,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산성우, 탄산가스 공해, 오존층의 파괴 등을 짧은 시간에 싼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발명가는 말하고 있다. 말대로라면 EM은 환경정화의 구세주적 존재인 것이다. 현재 가장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를 'EM 발효제'를 사용하여 퇴비로 만드는 일이다.

EM의 보급현황은 어떠한가?

EM은 현재 아시아, 남미, 북미 그리고 유럽지역을 비롯한 45개국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권의 태국과 남미권의 브라질이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M기술보급에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정보발신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태국에 EM농법이 소개된 것은 1986년으로서 자연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였다. 농업국인 태국에서는 농작물을 중심으로 받아들인 EM기술을 지금은 축산, 과수, 조림, 수산, 폐기물 처리와 오염처리 등에 까지 확대 응용하고 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1백3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태국의 자연농법센터인 '사라부리농장'은 EM을 사용한 농작물을 생산할 뿐만아니라 EM 기술의 교육장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1993년도까지 이곳에서 4박5일동안의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은 9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태국이 이처럼 EM농법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에는 국영방송을 포함하는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서였다 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을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중국, 인도, 네팔 등의 (70)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989년에 EM 기술이 소개되어 1991년 4월에는 자연농법국제연구개발 센터의 한국지부가 설립되었다.

남미지역에서 브라질이 EM 활동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이 나라의 농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때문이었다. 브라질의 농업은 전근대적인 화전농업에서 근대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어느 것도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한 브라질이 EM 농법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재로서는 자연친화적인 낭비없는 자기완결형의 농업경영의 길이 열린 것이다.

브라질은 EM 보급을 통해 공해, 빈곤 그리고 질병이 없는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꿈꾸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미래도시의 구상이기도 해서 눈길을 끈다.

지금은 EM 기술의 개발국인 일본에서도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기에 일본에서의 그 활용이 부진했던 것은 일본의 공업우선, 농업경시의 정책하에서 농약과 비료회사, 농협 그리고 행정당국의 3자합일의 신기술에 대한 거부반응이 거세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자연농업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적 연대를 위한 기구설립은 물론 1989년도에 태국에서 1991년도에 브라질에서 그리고 1993년도에는 미국에서 국제회의도 개최한 바와 같이 EM활용운동은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운영위원회가 금년에는 오는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EM 활용은?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차적인 시험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국의 2백60개 시.군.구의 쓰레기 문제를 총지휘하는 내무부 공기업과에서는 'EM발효제가 환경을 살린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버려질 음식물찌꺼기에 EM 발효제(EM 보카시)를 뿌려 무공해 농산물을 위한 퇴비를 만들어서 자원을 아낄 뿐만 아니라 하천오염도 막는 일이다. 무 리한 짓이다.

EM 발효제를 사용해 작물재배에 먼저 성공한 경기도 연천군에 이어 현재 EM농법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의 15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시험재배한 벼, 고추, 배추 등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 작물보다 벼의 낱알은 많고 고추의 열매는 훨씬 크게 하는데 성공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산지를 개간하여 더덕을 재배하는데 EM을 사용한 결과 그 성과는 5년간의 재배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감귤과 알로에 재배에 그리고 한국인삼 연초연구소에서는 인삼과 연초의 EM 시험재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자연농법국제연구개발센터 한국지부 소장 이경희 박사의 1993년 4월 보고에서)

또한 부산일보는 1993년 1월 23일자 기사에서 EM을 활용한 생활쓰레기 문제를 보도한 바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분야 못지 않게 쓰레기 처리에 EM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5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신관동 주공아파트 1단지의 2백40가구가 발효제를 활용해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일을 시작한 지 일년도 채 못돼서 쓰레기의 양을 95%나 강량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없다는 것과 매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처리해야 했던 수고가 덜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퇴비는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여지며 시 행정당국으로서는 쓰레기 수거의 빈도를 줄일 수 있어 비용절약이 돼서 반기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민과 관이 합심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이
불리수거처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 운동을 쉽게 정착하게 할수 있었는것은

우리나라의 음식찌꺼기 처리는 어떻게?

1993년도 우리나라의 연간 총 폐기물 발생량은 5천2백58⁵⁸톤으로 생활폐기물은 그중 43.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17.5%)를 제외한 일반 폐기물(82.5%)의 관리를 위한 수집, 운반, 처리비와 매립, 소각시설의 설치비 등에 투입된 1993년 예산은 8천8백억원이다.

생활쓰레기의 31%나 되는 음식찌꺼기는 오수 및 악취로 취급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매립처리할 경우 침출수의 주원인으로 지하수 오염과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유발한다. 또한 높은 수분함량은 소각시 소각비용상승의 원인이 되며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유독가스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음식물 찌꺼기를 적절하게 처리만 한다면 양질의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음식의 원료값으로 환산해서 연간 8조원으로 계산되는 음식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데에서 그 만큼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정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자에 대한 음식쓰레기 감량화 시설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 의무화 실시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1일 평균 3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금년 9월 1일부터 1일 평균 2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바닥 면적 6백60 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각각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상이 1994년도에는 3백13개소이다. 이 규제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량은 일당 약 1백41톤으로 추정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0.71%에 해당된다.

9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이 규제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분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994년 실시로 47억4천만원, 1995년 확대 실시로 79억1천만원의 순편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상업체의 경우 설비인용년수인 7년간의 업소당 1994년도에는 2천6백만원, 1995년도에는 1천8백만원 정도의 순손실을 봐야 한다. 이 분석에 의하면 업체의 손실 만큼이 지방자치단체의 편익이 된 셈이다. 음식찌꺼기의 감량의 효과는 불과 0.71%에 지나지 않는 이 규제실시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재조정 및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 시범사업은 일차실시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확대실시의 경우는 불가결의 일이다. 설비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한 검토, 생산된 퇴비의 수거운반처리체계 수립, 퇴비의 품질기준 및 중금속 허용농도 제정 등의 미흡한 점도 보완돼야 한다.

환경문제해결도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지대정화사업(Super Fund Project)에서의 쟁점도 바로 기술 선택에 있다. 보다 환경친화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유기폐기물 처리에 발효제(미생물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금번 규제에도 발효제를 사용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어떤 발효제와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나이며 그것이 성공을 가름한다. 하게 된 것.

음식찌꺼기의 자원화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량배출업소에 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국의 모든 가정이 음식찌꺼기의 자원화운동에 참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은 적게 손쉽게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음식찌꺼기는 자원과 독극물의 두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찌꺼기의 얼굴이 결정된다는데 우리들의 결단이 요구된다.

수신: 세계일보 월간부 손국선 기자님

세계의 녹색도시운동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박 영 숙

한국 환경·사회정책 연구소 소장

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세계의 110여개국의 정상들이 자리를 같이했던 유엔환경과개발회의에서는 “리우 선언문”과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 21”이라는 행동계획을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의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에서 28일까지 영국의 산업도시 맨체스터에서 “도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주제 하에 개최되었던 “94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4)”를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회의에는 세계의 50개 도시로부터 600여명의 지방정부, 의회, 기업체 그리고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의제 21”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회의는 리우 회의 이후 유엔의 “지탱 가능한 발전 위원회 (CSD)”가 마련하는 첫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의 도시 정책에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도시 빈민, 취업과 생계, 정부의 기능과 시민과의 민주적 협력 관계, 도시 환경과 건강, 자원과 토지 이용, 시장기능과 재정, 그리고 교통과 통신 문제 등이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환경 관련 국제회의와 다른 점이 있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 대표들과 기업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한 것이며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그리고 시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시민 차원에서 논의한 회의였다는데 있다. 이 회의에서 300페이지에 달하는 토의 결과는 유엔 기구에 제출되어 녹색도시를 위한 국제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나라의 도시가 이번 회의의 참가도시로 선정된 50개 도시에 포함되지 못한 일이다.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의에서 우리 나라도 합의에 서명한 바 있는 “의제 21”의 제 28장에서는 참가국들로 하여금 오는 96년까지 국가별 그리고 지방정부 별의 “의제 21”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여유는 1년여에 불과하다. 이 시점에서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무엇을 어디까지 누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그들의 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세계의 녹색도시운동은 시작된 것이다. 녹색도시운동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95년 6월에 실현 예정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나 이 작업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방 의제 21”이란?

리우의 지구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인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지구의 지탱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 적인 지탱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관계의 청사진이다. 이것은 40장으로 이루어진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문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자원 소비 감축 • 폐기물 배출 감축 •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 공해 감축 및 방지 • 오염 지대 정화 • 환경 훼손 방지 • 에너지 관리 • 환경 우호적인 교통 수단 • 산림과 종의 다양성 보존 • 차별과 빈곤 타파 • 각 사회 집단의 세력화 • 인간의 기본인권으로서의 주택문제를 비

룩한 생활 요건 확보 • 균등한 교육 기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의제 21”은 특히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제 21”의 ⅔의 행동계획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탱가능한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국가들의 “의제 21”의 실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국가별의 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96년도까지의 2년간 그리고 1996~2000년까지의 5년 계획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리우회의 직후부터 “지방 의제 21”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세계에는 또한 이러한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연대와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도시 연맹”같은 기구들도 조직되어 세계의 도시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쌍방간의 협력 관계인 자매결연이나 국가를 단위로 하는 유엔과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엔이 앞으로도 계속 도시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가 96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의 회기로 이스탄불에서 “유엔 정주권 제2차 회의(UN Habitat II Conference)”를 개최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도시정상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도시화 문제를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발전 계획의 우선 과제로 부각시키는 것을 필두로 도시관리 문제와 주택 개발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촉진시키고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기간 시설과 봉사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과 기회 제공을 도모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 도시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형평성 있으며 지탱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이 도시화 문제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2000년대에 이르면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게 되며 나머지 50%의 인구들도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도시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도시의 인구가 폭증하게 되며 환경 파괴와 사회적 혼란, 실업율의 상승, 그리고 주택문제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 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 등의 도시화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도시화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구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도시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그들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응은?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의 다자간의 환경협약은 1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25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서명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도 지구환경 보존에의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이 되며 따라서 우리 나라도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중앙정부가 “한국 의제 21”을 수립해야 하는 것음 물론 지방정부들도 “지방 의제 21”을 각각의 지방 사정과 특성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로는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은 아직 “지방 의제 21”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지방 정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오늘날의 국경 없는 환경 문제와 환경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자치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환경정책에서 양극의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 발휘로 환경이 보전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민간환경단체들이 몇 지역에서나마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세아-태평양 시대가 열리게 되며 중진국으로 성장한 우리 나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환경문제에 관한 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다른 나라들의 녹색도시 운동의 단면

가까운 일본의 가와자키시의 경우를 보면 이 도시는 21세기를 향한 녹색도시 만들기의 슬로건으로서 “가와자키 신시대”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그들의 활동 이념은 사람과 환경에 친화적인 복지 도시, 세계에 개방된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의한 시민자치를 존중하는 도시, 그리고 시대를 주도하는 힘이 넘치는 도시사회의 건설에 두고 있다. 이 도시는 “가와자키 신시대 2010 계획”이라고 명명된 녹색도시의 종합계획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것은 이 도시의 기본 계획으로서 “지구 시민 시대에 있어서 인간도시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미래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의 내용은 ①평생복지도시 만들기 ②쾌적한 도시 만들기 ③지역자립 도시 만들기 ④창조 발신 도시 만들기 ⑤시민자치도시 만들기 등의 5개로 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생태 감시 25 (Eco Check 25)”라는 생태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25개 항목을 설정하고 도시의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시애틀의 경우 시민들이 전개하는 “지탱 가능한 시애틀의 지표”라는 활동이 돋보인다. 이것은 환경, 인구와 자원, 경제, 그리고 문화와 사회 문제에 걸친 40개 항목 (1993년도 20개)의 시애틀의 지표를 앞으로 계속 해마다 조사 분석 발표하는 활동이다. 이 작업은 시애틀 시민들에게 당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문제 해결에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94 지구환경회의에서 이들의 활동은 높이 평가받은 바 있었다. 이들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더러의 지표는 향상된 것에 반해 보다 많은 지표에서 악화 일로의 현상에 직면하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을 지탱 가능한 도시, 녹색도시로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4 지구환경회의”가 열린 맨체스터 시의 경우 맨체스터 의회는 리우 회의 이전부터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녹색 팀 (Green Team)”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금세기 초의 산업혁명의 심장부였으며 일찍부터 도시화가 되어 환경파괴현상의 전시장이기도 한 맨체스터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맨체스터 의회는 녹색 팀으로 하여금 “맨체스터 의제 21”의 작업을 하도록 해 이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지금은 그의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지면 관계로 또 다른 예를 들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세계의 어느 도시나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쉽게 할 수 없게 하는 나름대로의 사정들을 안고 있는 것을 이 회의의 참가도시들의 공통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개발국가의 도시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의 도시들도 이 과제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인간과 함께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녹색 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 의제 21” 설정을 위한 시민의 역할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의제 21”의 28장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의제 21”의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며 알고있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가 남북간, 국가간 또는 블럭간의 이해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의 열쇠는 민간단체들의 압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들 한다. 우리 나라의 각급 정부로 하여금 해당 “의제 21”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최근 크게 성장하여 그 영향력도 상당한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내가 사는 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실천의 의지이다. 녹색가정에서 녹색도시 그리고 녹색국가와 녹색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의 대책은 강경해질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 회의도 빈번해지고 규제 또한 엄격해질 것이다. 세계의 도시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 대책에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다.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UR에서나 GR에서 우리 나라의 뒤쳐진 대처로 인해 입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행동계획 설정에 노력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